

KIIP_DB_Advanced

대한민국의 국민

1. 대한민국 및 국민의 정체성

01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및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체성 및 특징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번 차시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목표

1. 헌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법들과 여러 국가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법들도 모두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다른 법률과 헌법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 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에서 헌법은 최고법이 지위를 가진다.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은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평화통일과 같은 국가의 이념과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와 평등, 납세와 국방 등과 같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권력분립 원리에 기초하여 세워진 여러 국가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1987년까지 총 9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내용, 국회가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즉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는 내용,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와 같은 헌법의 성신에 따라 민주주의, 인권 보상, 남북통일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한민국 돋보기: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용어

-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이 가지는 존귀하고 본질적인 가치
- **평등:** 지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 **헌법재판소:**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재판소
- **감사:** 감독하거나 조사함

02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

비농사 문화권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문화 심리학자들은 많은 노동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비농사의 특징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비 농사 문화권의 사람들이 대체로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공동체를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특징을 몇 가지로만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와 국민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특징이다. 이들 중 어떤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가?

- 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다.
-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본다.
- 핵심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한다.
-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한다.
- 드라마에서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 '식사 하셨어요?'라고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인사말로 사용된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갈 때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가지고 간다.

- 소속감이 강해, '한국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는~'이라고 말한다.

위 내용들은 대체로 한국인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한국인들은 유교 문화 등의 영향으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겨 어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해 왔다. 또 오랜 기간 벼농사를 지어오면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습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벼농사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일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타인과 서로 돕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정이 많은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쌓여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이 형성되었다. 물론 위 내용과 같은 특징이 모든 한국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모두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이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전통적으로 예의범절을 중시해 왔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그러한 풍토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중요한 문화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술을 따라주면 두 손으로 잔을 들어 받기도 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도 한다. 자기들은 첫 월급을 티면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속옷을 선물하는 관습도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복잡한 높임말도 바로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깊다.

정리하기

1.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

- **대한민국 헌법 성격:**
 - 국가 구성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
 - 국가의 최고법
- **주요 내용:**
 - 국가의 이념과 원리 규정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 국가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방법
- **현행 헌법의 특징:**
 - 대통령 직선제

- 국회의 국정감사권
- 헌법재판소 설치 등

2.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

- 예의범절 중시, 부지런하고 근면한 습성, 정이 많은 공동체 문화 등

2.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되는 법치국가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 또한 헌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권리란 무엇이며, 이를 왜 보장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 기본적 권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권이 각각 실제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학습목표

1. 권리의 의미를 통해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시할 수 있다.

01 자유와 평등의 존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교육 세도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닌다. 이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자유권
- 평등권
- 사회권
- 참정권
- 청구권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찰이 국민을 함부로 잡아가거나, 각 개인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은 모두 자유권의 사례에 해당한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신분, 인종 등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게 되며,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명동이란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돋보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최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서로 간의 정이나 신뢰로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요즘은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경향을 볼 때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송만능주의 현상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소송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이 밑바탕에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는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은지 반성해 필요가 있다.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한다면 법적 다툼과 분쟁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경향신문 2014-8-17 기사 재구성)

주요 용어

- **특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이익

02 인간다운 삶과 참여의 보장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자유와 평등 못지않게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위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은 국가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것 등이 참정권의 사례이다.

이 외에도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이 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이러한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구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원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기관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또 재판청구권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

- **자유권** : 개인의 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 함부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
- **평등권** :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 **참정권** : 정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청구권**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 탐구탐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권리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자유나 권리까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그것도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행사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용어

- **삼계**: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
- **진술**: 일이니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하다
- **복지**: 풍요로운 생활, 건강 평안한 환경 등이 어우러진 행복한 삶

3.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뿐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4대 기본의무와 추가적인 의무로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한다.

학습목표

1. 대한민국 국민의 4대 기본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2. 4대 기본의무 외에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를 제시할 수 있다.

01 대한민국 국민의 4대 기본의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의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 때 세금이 국가 마음대로 부과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은 일정 기간 군에 입대하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단순히 군 복무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평상시에도 국방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가 가지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가진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만 6세 이상이 되면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의무교육제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자신의 생활을 보호해 주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정당한 근로를 통해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돌보기: 귀화한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은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그렇다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성인 남성도 군대에 가야 할까? 귀화한 남성은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귀화 허가서, 병역복무 면제 신청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귀화자는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방위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귀화자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기 때문이다. 한편, 귀화한 남성이 스스로 원해서 군대에 가고자 한다면 징병검사를 받은 후 군에 입대할 수 있다.

주요 용어

- **납세:** 세금을 내다.
- **과태료:** 의무 위반에 대한 벌로 내야 하는 돈
- **국방:** 국가 안정과 보존을 위하여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행위
- **복무:** 어떤 직무나 일에 힘쓸
- **삶의 질:** 물질적, 정신적인 것 등을 포함한 행복의 정도
- **징병검사:** 군에 입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조사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을 하는 것

- **현역:** 군에 입대하여 실제로 복무를 하는 병역

02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는 무엇이 더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기본의무 외에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지만, 이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만 지나치게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복리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환경이 훼손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모두 함께 생활하기 위해 **환경 보전의 의무**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업은 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개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는 아니지만 **정치 참여의 의무**나 **준법의 의무**도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표자 선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 참여 의무는 정치 참여 권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이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해진 소중한 약속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을 존중하고 따를 때 우리 자신의 권리도 잘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정치 참여를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 할까?

대한민국에서 정치 참여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런데 정치 참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낮은 투표율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20달러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벨기에에서는 15년 동안 4회 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10년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법적 제재를 기하거나 의무로 만들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자본주의:** 자유로운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 체제
- **공공복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동의 이익
- **오염물질:**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 **정책:**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수단

정리하기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의무

- **국민의 4대 기본의무**

-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납부한 의무
- **국방의 의무:**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기여할 의무
- **교육의 의무:** 일정 연령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
- **근로의 의무:** 자신의 능력 내에서 정당한 근로를 할 의무
- **기타 의무**
 -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재산권 행사에서 공공복리를 고려할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할 의무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도의적 의무

- **정치참여의 의무:** 민주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할 의무
- **준법의 의무:** 법을 지킬 의무

4.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의료급여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학습목표

1.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과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01 걱정은 사회보험에게 맡기자고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과 같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평소에 국가에 일정한 돈을 내면, 실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사회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료보장)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소득을 보상해 주는 형태(소득모상)도 구문된다. 사회보험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1.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보험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의료비 보장이 잘 되어 세계적인

로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 **고용보험**은 소득보장 보험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실직 근로자는 급여를 받거나 무료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평소에 일정액을 납부하면 은퇴 이후 연금의 형태로 일정 소득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 매년 물가승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민간회사의 연금에 비해 장점이 많다. 오늘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에 모두 해당하는 제도로, 일을 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보상을 준다. 보통 '산재보험'이라 불린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다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줄 뿐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만큼 일정한 급여를 주기도 한다.

TIP: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인가요?

의무 가입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TIP: 사회보험료도 세금인가요?

사회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의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국기 업무를 위해 납부하는 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돌보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용보험 납입기간:** 직장을 떠나게 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용어

- **실직:** 직장을 잃음

02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모든 사람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본인의 의지와 달리 가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몸이 아파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공부조** 제도, 즉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급여 등을 지원하여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1. **지원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
2.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756,574원 (2016년 기준)
3. **얼마나 주나요?** 혜택 받는 국민의 소득 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지급
4.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문의

공공부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사회보험과 다다.

첫째,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구별된다. 사회 보험은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방식이지만 , 공공부조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장해 주는 최저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린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최저생활이란 이와 같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복지 긴급전화는 129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보건 복지, 가족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건복지콜센터에 어떤 내용을 물어볼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은 소득보장 문제에서부터 긴급 복지 지원, 아동 학대, 노인 학대와 같은 긴급 사원 운세까지 복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는 이주 여성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여 자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서는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특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인이 염원하는 국가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번 차시에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목표

1. 광복 이후 한국이 분단된 배경을 말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01 8.15 광복과 건국 준비

한국은 1910년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지만 끊임 없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19년에는 전국적으로 3.1 운동을 벌였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우리 국민 스스로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자 노력했고, 이승만과 김구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새 나라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광복 직후 한반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특히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즉시 독립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신탁통치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신탁 통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돌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운동 이후 한국인들은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더욱 조직적으로 국내외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은 강대국과의 외교에 힘을 쏟았고, 안창호는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김구는 한국광복군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주요 용어

- **치안:**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 **신탁 통치:** (다른 사람이나 나라가 다스릴 수 있도록) 믿고 맡김

02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기 나라에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고자 대립했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은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과 북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념의 대립도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UN은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이 과정에서 통일 정부가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다(제주 4.3 사건).

이런 여러 아픔을 딛고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새로운 나라를 위한 헌법을 제정하였다(1948년 7월 17일, 제헌절).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탐구탐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헌법은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헌법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고 있다.

제 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요 용어

- **무장 봉기:** 무기를 갖추고 일어나 저항할
- **8월 15일:** 이날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국일 이기도 함

정리하기

8.15 광복과 건국준비

- 1945년 8월 15일 광복
- 건국준비위원회 등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

- 북위 38도선 남북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들어옴
- 유엔의 총선거 결정과 북한의 거부
- 남북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둘러싼 갈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6년 5월 10일 [남]만의 단독선거 실시
-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 한국전쟁과 남북관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은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현재까지도 남과 북의 분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한국인들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목표

1. 한국전쟁의 시작에서부터 휴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전 협정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01 한국전쟁과 정전 협정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은 철수했지만 남북의 경계였던 38도선을 둘러싸고 군사적인 충돌이 늘어났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공하였다(한국전쟁). 하지만 병력과 장비가 부족했던 남한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아래로 후퇴하였다.

UN은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UN군을 파견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켰다. 한국군과 UN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고 평양을 넘어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중국군이 북한군을 지원하면서 한국군과 UN군은 후퇴하였고(1,4후퇴, 1951년), 이후 남과 북은 38도선을 두고 대치하였다. 전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측은 휴전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UN군과 북한, 중국 대표가 정전 협정(1953년 7월 27일)에 서명하면서 전쟁이 멈추었다.

대한민국 돋보기: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당시 16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타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에서 전투 병력을 지원했으며, 그 외 5개국(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의료 부문을 지원하였다. 지금도 한국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도움을 준 이들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주요 용어

- **철수:** 있던 곳에서 물러남
- **정전:** 전쟁을 멈추는 것

02 남북관계의 전개와 발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과 북은 서로를 불신하며 긴장과 대립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평화를 원하는 분위기가 많아지면서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면서 남북교류가 늘어났다. 1991년에는 남과 북이 UN에 동시 가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남과 북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만났다. 당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 교류를 늘리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등 남북관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2007년에는 2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 남북 공동 선언에 남과 북의 평화를 지향하고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남과 북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과거 남과 북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했다.

남북관계를 개선 사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사건
1984년 남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북한의 물자 지원	2002년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교전
1995년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남한의 쌀 지원	2006년 북한 제1차 핵실험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2009년 북한 제2차 핵실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정리하기

1. 한국전쟁과 정전 협정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 →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아래로 후퇴 → 국 제연합에서 유엔군 파견 →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북한으로 진격 → 중국군의 개입으로 1.4후퇴 후 38도선 대치 →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2. 남북관계의 전개와 발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 198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 → 1991년 남한과 북한의 UN 동시가입 및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 →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 2000년 1차 남북 정상 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 → 2007년 2차 남북 정상 회담 및 10.4 선언

7. 민주주의의 발전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한국 국민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민주적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목표

1.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오늘날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성립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01 4.19 혁명과 유신 반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맡았다. 그는 6.25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치를 이끌었지만 1960년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 학생들까지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 시위를 진압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 이후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고(5.16 군사 정변), 이후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과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했고,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10월 유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한 시민들의 저항이 늘어났다. 특히 부산과 마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정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부마 민주항쟁).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10.26 사태).

대한민국 돋보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학생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도한 경우가 많다. 특히 4.19 혁명에서는 전체 186명이 희생자 중 77명이 학생이었다. 당시 시위에는 대학생들은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는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주요 용어

- **정변:** 주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정치상의 큰 변동
- **유신 체제:** 1972년에 개정된 유신 헌법에 의해 다스리던 통치 체제

02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10.26 사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인들은 병력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12.12 사태, 1979년). 이에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전두환 등 군부 세력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 하여 군대를 투입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다(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이 사건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강력한 정책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 주의적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특히 1987년에는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지만 전두환 정부는 이를 무시하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였다(6월 민주항쟁, 1987년).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발전해왔다. 1993년에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군부 세력에 의한 정치가 끝났다. 또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였다. 2007년에는 다시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다 안정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1948년 처음 근대적 선거를 도입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만 21세로 정했다. 이후 1960년에는 만 20세로, 2005년에는 만 19세로 낮추었다. 최근에는 참정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

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나 그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권 부여 연령 (2016년 6월 기준)

- **16세:**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 **17세:** 인도네시아 수단 등
- **18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인도, 프랑스, 미국, 멕시코, 호주 등
- **19세:** 한국
- **20세:** 대만, 나우루 등
- **21세:** 싱가포르,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용어

- **군부:** 군대 조직
-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

정리하기

- **4.19 혁명**
 -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선거 부정
 - 시민들의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 **유신 반대**
 -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
 -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
 - 10.26 사태로 유신체제 끝남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전두환 등 군인들의 철권 장악에 대한 광주 시민의 저항
 - 군대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희생
- **6월 민주항쟁**
 -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시민의 반발과 시위
 -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대통령 직선제 부활

8. 한국 사회의 변동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다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양상과 전망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학습목표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

01 저출산과 고령화

한국의 인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50,61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에는 6명을 넘을 정도로 자녀를 많이 낳았다. 국토는 넓지 않은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자 1960년대~1980년대에는 자녀를 적게 출산하자는 산아제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물만 남아 잘 기르자.",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와 같은 당시의 인구 정책 관련 포스터의 문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여성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다. 2015년 출산율 1.24명을 기록했다.

한편,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영양 위생 환경의 개선 등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2015년 노인 인구 비율 13.1%, 노인 인구 수 약 663만 명인데, 204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2.5%, 약 1,6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비율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인구가 점점 줄고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으로 인구의 구성이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

주요 용어

- **합계 출산율** :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15세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2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대한민국

교통, 통신의 발달 결혼이나 취업 유학 등과 같은 다양한 교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외국인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90만 명의 외국인이 살아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57만 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약 13만 명(11.2%), 필리핀 약 4만 5천 명(4.0%), 인도네시아 약 4만명(3.5%), 타이 2만8천명(2,4%), 미국 약 2만 4천명(2.1%)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데, 외국인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에 특히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었다. 등록 외국인의 32.3%는 경기도에, 24.1%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 수와 그 자녀의 수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인적 교류, 학술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외국국적 동포와 유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30년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500만 명을 넘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2011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문화 공존에 대한 찬성 비율은 36%로 유럽 18개국의 74%에 비해 매우 낮았고, 2012년 전국 국제결혼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이 41.3%로 나타나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특정 문화권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 하려는 포용적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정리하기

1. 저출산과 고령화

-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0,617천 명
- 저출산: 2015년 출산율 1.24명
- 고령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3.19%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2.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 2015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190만 명 인구 100명당 3,75명이 외국인
- 거주자의 국적: 중국, 베트남, 필리핀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변화

-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

9.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번 차시에서는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는 정보 강국으로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학습목표

1. 세계 속에서 정보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01 세계 속의 정보 강국, 대한민국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성장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컴퓨터, 통신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나갔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 경쟁력은 세계 6위, 기술경쟁력은 세계 13위로 정보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2015년 기준).

오늘날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TV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분야로 성장하였고, 전체 산업 수출 중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2014년 기준). 신호등을 제어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교통정보 시스템, 교통카드를 활용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교통결제 시스템, 범죄 신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범죄 신고 전화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제조사가 만든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다(2014년 기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품질과 무선인터넷속도는 세계 1위(2012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2위로(2013년 기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 신청 등을 집 안에서 손쉽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돋보기: 생활민원을 손쉽게 해결하는 민원 24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전자민원 서비스이다. 민원24 홈페이지

지에 접속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을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이사, 사망, 자동차, 부동산, 취업·창업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관련된 민원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묶어서 안내하는 민원패키지 서비스와 가족 건강, 세금, 연금, 범칙금,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2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원조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약 18억 달러에 달한다. 공적개발원조는 현금 지원, 물자 지원, 인프라 구축,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으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 등에서 활발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네갈의 마을에 우물을 파고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을 설치한 사업,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과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이 머물 컨테이너 집을 짓고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 모로코의 청소년에게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돕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 네팔의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 등이 공적개발원조의 다양한 모습이다. 2004년부터는 기존의 방식 외에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기관이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 (국가명 불명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형거 zero hunger)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는 노동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에게 일당으로 식량을 지급해 배고픔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용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전 세계 원조의 90%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국 모임
- **원조공여국:** 다른 나라에 물품이나 돈 등의 원[... (내용 불명확)]를 제공하는 나라
- **공적개발원조:**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현금, 상품, 서비스 등 포함)

정리하기

1. 세계 속의 정보 강국, 대한민국

-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을 전세계로 수출
-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편리하게 변화

2.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한민국

-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 전환한 유일한 사례
- 공적개발원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

10. 대한민국의 권력분립과 입법부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 분립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공부하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의의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학습목표

1. 권력분립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01 권력분립은 왜 필요할까?

모든 국가 권력이 한 명의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감시를 받지 않고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지도자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국가 권력을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국가 권력을 몇 개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을 '권력분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기관이 각각 맡은 역할에 집중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된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 이처럼 삼권분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돋보기: 귀화자도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국가기관에 속하여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인기가 좋은 직업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퇴직 후의 연금 소득이 비교적 높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귀화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엄연한 국민이므로 일정한 조건과 실력만 갖추었다면 누구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실제로 몽골 출신 할리온 씨는 한국인 남편을 따라 2008년 귀화하여 그 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녀가 응시한 분야는 어학우수자 (몽골어 분야) 전형이었다. 점차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귀화자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용어

- **분립**: 갈라서 따로 세우는 것
- **시행착오**: 어떤 일을 실제로 해보면서 실수다. 잘못을 경험한
- **견제**: 상대방이 지나치게 많은 세력을 가지거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 하도록 제한함

02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

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 운영을 위한 [법]에 대해 논의하는 공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운영은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법부라는 명칭 또한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명칭은 '국회'이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이들을 선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회는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한다. 때로는 불필요한 법률을 없애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국회는 **국가 재정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부가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사하여 확정하고, 행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셋째, 국회는 **국정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 또 정부가 총리나 장관, 대법관 등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조사하는 등 임명 절차에 관여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국회의원 선거! 2.3.4를 기억하세요.

- 2번: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횟수
 -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선출하기 때문에 두 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 300명 : 현재 국회의원 전체 수
 -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 총 300명이 정원이다.
- 4년 :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주기
 - 대한민국은 4년에 1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특히 매 4년째 되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주요 용어

- **개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다시 고치는 것
- **재정**: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
- **국장**: 나라를 다스리는 일
- **통제**: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

정리하기

1. 권력분립의 원칙과 필요성

-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원칙
-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됨
- 국가기관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처리함

2. 대한민국의 입법부

- 국회: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기관
- 국회의원: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대표자
- 국회의 역할: 입법기능, 재정기능, 국정통제기능

11.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여러 기관들에 관해 학습하게 된다. 특히 행정부의 세부적인 조직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원의 조직과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학습목표

1.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법원의 조직과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01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대통령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보다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각각 고유한 권력과 정당성을 갖는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로는 한국과 미국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은 단 한 번만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5년 단임제**).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며, 국가 운영에 관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
-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헌법을 줄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 등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조직을 **행정부**라고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업무 전체를 관리한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각 부의 최종 책임자인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행정 각부**에서 담당한다. 행정 각부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가리킨다.

-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육부**는 국민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정과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일도 많이 담당한다.
- **고용노동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일도 많이 담당한다.

대한민국 돌보기: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제가 아닌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현재까지 11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의원내각제를 한 적이 있다. 바로 1960년 4.19혁명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 때이다. [의]원내각제의 만큼 국가 운영은 내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장면 총리가 그 지도자였다. 하지만 약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끝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도 의원내각제를 한 적이 있음을 잘 모르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주요 용어

- **국무**: 나라의 일
- **고용**: 대가를 받고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

02 정의를 지키는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 국가에서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대체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사건이 생겼을 때 그에 적합한 해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부는 법원이다.

사법부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잘못을 가려내고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 재판을 통해 벌을 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대법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아래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방법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를 **3심제**라고 한다.

이처럼 법원은 재판을 통해 법에 따리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갈등을 해결해 준다. 한편, 법원은 재판 외에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 하기도 한다. 집이나 땅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 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등기라고 하는데, 이 또한 법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써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준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

2007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산업연수생 1인당 760만~9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외국인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향신문 2007-01-03 기사 재구성)

주요 용어

- **법치주의:** 한 개인이나 집단의 독재를 막기 위해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원칙
- **분쟁:** 발생을 일으켜 다투는 것

정리하기

- **1.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행정부**
 - **대통령:**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함.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새로 선출함.
 - **행정부**
 -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 업무 전체를 관리
 - **행정각부:** 행정부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 행정 각부의 최종 책임자를 장관이라고 함.
 -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이라 하고, 국가사무를 논의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함
- **2. 정의를 지키는 대한민국 사법부**
 - **사법부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 **법원**: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대법원 아래 고등법원, 그 아래 지방법원으로 구성
- **법원의 역할**
 - **재판**: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법원의 활동
 - **그 외**: 집이나 땅이 누구의 것인지를 등록하는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함

12. 대한민국의 선거와 정당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정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정당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정당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학습목표

1.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정당 제도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01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종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일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뜻을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표자를 통해 국가 운영을 담당 하도록 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을 **선거**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는 줄여서 **대선**이라고도 부르는데 **5년에 한 번씩 12월**에 실시된다. 대한 민국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다.

둘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이는 줄여서 **총선**이라고도 부르는데 **4년에 한 번씩 4월**에 실시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만들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지방선거**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운영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와 같은 광역 단위, 시·군·구와 같은 기초 단위를 토대로 지방자치기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지방자치를 담당할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6월**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를 줄여서 '지방선거'라고 부른다. 이 때 지방의 교육 행정을 담당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민주 주의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돋보기: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

- **Q.** 한국의 여러 선거 중 가장 많은 투표용지가 필요한 선거는 무엇일까?
A. **지방선거**이다.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많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차례로 쌓아올리면 약 2만 8천㎡에 달해, 백두산(2,750m)의 10배, 에베레스트산(8,848m)의 3배를 넘는다.
- **Q.**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당선된 사람은 누구이며 몇 [살]이었을까?
A. 1954년 선거에서 당시 **26세의 김영삼 후보**가 최연소로 당선되었다. 그는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 **Q.**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가장 많이 출마한 후보는 몇 번 출마했을까?
A. **4번**이다. 김대중 후보가 1971년, 1987년, 1992년, 1997년에 출마하여 1997년에 당선 되었다.

주요 용어

- **대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논하는 것
- **사표:**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에게 던진 표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음을 비유하여 죽은 표(사표)라고 부
- **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02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은 대부분 어느 한 정당에 소속 되어 있다. **정당**이란 정치에 대해 비슷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자발적 단체를 말한다. 정당은 국회와 정부 등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 정치를 추구한다. 국민들은 특정 정당의 활동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 반대로 특정 정당이 잘못된 정책 수행으로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선거에서 그 정당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묻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복수 정당제**가 보장된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한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 운영에 반영

되기도 어렵고 특정 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민주 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복수 정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재보궐선거란 무엇일까?

재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선거가 있다. 이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 **재선거**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유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선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선거 운동 중에 부정선거를 했거나, 임기 시작 전에 당선자가 사망하여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보궐선거**란 임기가 시작되고 난 후 발생한 사유로 궐석(빈 자리)이 생겼을 때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시장이 되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국회 의원을 사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 용어

- **자발적**: 남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행하는 상태
- **복수**: 둘 이상의 수

정리하기

- **1. 대한민국의 선거 종류**
 - **대통령 선거**: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출 선거
 - **국회의원 총선거**: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출 선거
 - **지방 선거**: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출 선거
- **2. 대한민국의 정당**
 - **정당**: 정치에 대한 비슷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자발적 단체
 - **정당정치**: 정당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정치에 반영
 - **복수정당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13.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제사회

오늘날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떨어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가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외

교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차시에서는 외교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날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탐구해 보도록 한다.

학습목표

1. 국제사회에서 외교 활동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2.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할 수 있다.

01 국제사회와 외교

오늘날 '국제사회'나 '세계화'와 같은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이웃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바뀌어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변화를 맞이하기도 하고, 다른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나 기업 간에 협력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에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위해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교**란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 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외교관**이라고 한다. 외교관은 주로 국가 간 협상이나 교류를 담당한다. 또한, 해외 교포나 해외여행객 보호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정상외교**라고 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간 외교 활동인 만큼, 경제 교류, 안보, 평화 정착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국가 정상이나 외교관과 같은 이들이 담당 하는 외교 활동을 공식적 외교라고 한다. 이 외에도 스포츠, 문화 등을 통한 외교도 있다.

오늘날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은 여러 나라와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돌보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줘요!

대한민국은 해외에 있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외교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보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해외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을 직접 찾아가면 된다.

또한 짧은 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도중에도 외교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도중 사건이나 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상담전화(영사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용어

- **세계화:** 생활의 영역과 수준이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 되는 현상
- **사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 **사후:** 어떤 일이 일어난 후
- **현대적 외교의 추세는?**
 -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평화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역 확대와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목적도 중시되고 있다.

02 국제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한민국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식량과 자금을 마련하던 나라였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국제 원조에 동참하여 사정이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2010년 G20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군의 해외파병을 통해 평화유지군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에서 평화 유지, 국가 재건, 건설 지원,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활약하였다.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의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직위를 수행했거나 현재 담당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나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등과 같이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 한국을 빛낸 인물도 많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해외 파병 한국군의 활약

"신이 내린 선물!" 이는 아이티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를 현지에서 부르는 별명이다. 이처럼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이 현지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군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지역에 국군의료 지원단,

양골라에 공병대대, 동티모르에 상륙수 부대 등을 파견하면서 평화유지군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분쟁 지역이나 자연 재해가 일어난 지역에 파견 되어 교육 의료 재난 구[호] 인도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2013년 필리핀에서 태풍 피해가 계속되자, 현지에서 재해 복구와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 2014.09.16. 기사 재구성)

주요 용어

- **정상:** 각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
- **G20:**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호주,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연합
- **직위:** 직무상의 자리

정리하기

- **1. 국제사회와 외교**
 - **외교 :**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
 - **외교관 :** 공식적으로 외교활동을 전담하는 공무원
 - **외교 유형:** 공식적 외교, 스포츠 외교, 문화 외교, 정상 외교 등
- **2. 국제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한민국**
 - **국제원조 동참:** 사정이 어려운 다른 나라 도움
 - **평화유지군 활동:**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에서 평화 유지, 국가 재[건], 건[설] 지원, 의료 지원 등 수행
 -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 위상**
 - **G20 정상회의 개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모여 회의 개최
 - **한류의 확산:**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기 몰이

14.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남북통일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 문제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된 과정을 먼저 살펴보

고자 한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 및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한다.

학습목표

1. 대한민국의 분단 과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통일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대한민국 분단의 현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분단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일시적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국, 북한에는 소련(러시아의 옛 이름)이 들어와 한반도를 나누어 통치한 것이 남북분단의 시작이었다. 1948년에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3년간 지속되었다. 1953년 정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오늘날까지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분단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우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나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또한 오랜 분단으로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민족 문화의 이질화로 인해 하년의 민족으로서 가졌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더불어 남북한 상호 간에 군사적 대립을 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돈을 국방비에 지출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민의 안전한 삶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돋보기: 남한과 북한의 언어, 얼마나 달라졌나?

지난 2003년 남한 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의 친선 농구 경기가 열렸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많이 달라져, 농구 경기 용어도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남한에서의 '골밑슛'이라는 용어를 북한에서는 '룬밑넣기' '자유투'를 '별넣기', '포워드'를 '공격수', '리바운드'를 '튀공잡기'라고 부른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 중에도 상당히 달라진 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주요 용어

- **분단**: 나누어 가름
- **정전**: 전쟁을 멈추는 것
- **판문점**: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군사 분계선에 있던 당시 마을의 이름
- **남북한 국방비 비교**
 -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약 33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 **도발**: 다른 사람을 건드려 문제를 일으킴

02 통일 한국의 미래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첫째, 우선 전쟁과 오랜 분단으로 형성된 남북 간 불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에 신뢰 회복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통일을 통해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남북한이 지출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를 줄여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다.

둘째,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본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쪼개져 여러 측면에서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일을 통해 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한반도의 구성원 모두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보고서

어느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2050년에는 다음과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 인구가 7,350만 명에 달하고,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인구 강국이 될 것이다.
2. 경제 성장 부문에서 세계 8위의 국가가 될 것이며, 1인당 소득도 8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
3. 통일 이후 약 40년 동안 국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1조 8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4. 올림픽에서 종합 10위권 수준이던 것이 5위권 이내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용어

- **이질:** 성질이 다름
- **열악:** 질이 몹시 떨어짐

정리하기

- **분단 과정**
 - 광복 직후 38도선으로 남북 구분
 - 6.25전쟁
 - 정전 협정 이후 휴전선으로 남북 구분
 - **분단으로 인한 문제**
 - 이산가족 발생
 - 분단비용발생
 - 남북한 간의 이질화
 - **통일의 어려움**
 - 남북 간 불신
 -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
 - **통일로 인한 장점**
 - 정치·경제적 이익
 - 행복하고 안전한 삶
 -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
-

대한민국의 경제

15.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

대한민국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적 약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운영되는 전반적인 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목표

1.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나타나는 시장 경제의 모습과 경제 민주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그보다 크기 때문에 인간은 늘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까? 돈을 벌면 얼마나 쓰고 얼마를 저축할까? 이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살까?"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경제 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한다. 반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 하도록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 들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잘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시장경제 체제)

-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사유 재산권 보장)
-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를 얻게 되며 자신의 창의성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된다.

대한민국 돋보기: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이 분단되던 무렵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수력발전소나 화학공장 등이 건설되어 있던 북한은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124달러로 남한의 82달러보다 앞서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 들이면서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2014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8천 달러이지만, 북한은 약 1천 3백 달러 안팎으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다.

주요 용어

- **계획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 북한, 쿠바 등
-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 **사유 재산권:**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02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체제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시장 질서를 해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민주화)

- **헌법 119조 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다. 예를 들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내보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벌금이나 형벌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힘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 등 특정 기업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이 시장 경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생계나 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여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의 경제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허위 과장 광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꿔주는 성형외과",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펴준다는 화장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등의 광고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광고를 하는 기업을 규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뉴스 헤드라인: "살이 빠지는 운동화"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징계 내려)

주요 용어

- **독과점**: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하나의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공급 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
- **규제**: 일정한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소외**: 무관심 등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함

정리하기

- **한국의 경제 체제**
 - **시장 경제 체제**
 - 사유 재산권 보장
 - 직업 선택의 자유

-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존중

→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여 풍요로운 삶 가능

○ 경제 민주화

-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법과 제도로 규제
- 독과점 기업 규제와 공정한 경쟁 유지
-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

→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16. 대한민국의 근로자

어느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다. 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동시에 근로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조건을 [잘] 갖추는 것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의 근로 조건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목표

1. 한국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 조건을 말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01 한국에서의 근로 조건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둘째, 근로자의 근로 시간 역시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추가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1주에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돈으로(혹은 통장을 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몇 달 치 임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

1.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
 - **진정:** 사전 상담 후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고소:** 임금을 주지 않는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 **체당금 신청:** 회사가 파산한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을 주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료법률구조:** 월 소득 4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 돌보기: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

한국은 과거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긴 시간의 노동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면서 근로 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늘어나면서 근로 조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물론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 시간은 긴 편이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늘어나면서 근로 조건이 점점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용어

- **사용자:** 일정한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
- **초과:** 일정한 한도를넘음]
- **1350:** 고용노동부의 전화상담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취업 지원 근로기준 등 근로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들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

02 한국 근로자의 권리 보호

한국에서는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한다.

-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 **단체행동권**은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업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에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여기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만약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을 때 퇴직자는 바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할 당시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실업급여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되는데 하루 최대 4만 3천원을 넘길 수 없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가 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용어

- **교섭**: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하고 절충함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의료 서비스 근로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 기관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제공하는 급여

정리하기

- **한국에서의 근로 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보호
 - 자유로운 임금계약
 - 최저 임금제 실시
 - 자유로운 노동 시간 결정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
- **한국의 근로자 권리 보호**
 - **노동3권**
 - **단결권:** 노동조합 결성
 -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
 - **단체행동권:** 근로자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음

17. 금융과 자산관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인 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자산관리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목표

1. 은행에서의 예금 및 대출에 대해 이해하고 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후 대비 및 자산 관리 방법으로 예금, 주식, 부동산, 채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은행업무와 보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예금**과 **대출**이다. **예금**은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은행에서 본인 이름의 계좌를 만들면 통장과 카드를 받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카드로는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융 거래의 경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 사업 확장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게 된다. 대출을 할 때는 **금리**가 무척 중요한데 금리에 따라 갚을 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평소 은행 거래 실적이나 주택 등 담보 자산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 등의 손해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한국에서는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암보험이나 의료비 실손보험이 대표적이다. 안보험은 만약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의료비 실손보험은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병원비, 약값 등을 보험료로 해결하는 것이다.

보험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돋보기: 한국에서의 금융 보안: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안이 매우 중요해졌다.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 사용된다. 공인인증서를 개인 컴퓨터나 USB에 넣어두면 전자상거래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다.

OTP 카드는 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 등의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안을 강화해 준다.

주요 용어

- **금리**: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율
- **담보자산**: 돈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맡기는 가치 있는 자산
- **해지**: 계약을 중단함

02 자산 관리하기

오늘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안정된 노후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금**이다. 예금은 은행에 자신의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이지만, 최근 금리가 낮아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예금보다 위험부담은 크지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도 있다. **주식 투자**는 증권사를 통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경영을 잘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는 상가나 아파트 등의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면 일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부동산을 팔면 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서이다. 채권을 구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 가격은 늘 변하기 때문에 쌀 때 사놓은 채권을 가격이 비쌀 때 팔면 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은 회사에서 발생한 회사채와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수익률은 비교적 낮지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급여 통장을 만들면 혜택이 있어요.

상점에서 단골손님에게 좋은 대우를 하듯이 개인이 어떤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주거래 은행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은행에서는 보통 급여 통장을 만들게 되면 이체 수수료, 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ATM기 수수료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급여 통장을 가진 개인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 급여 통장을 만들 때 이것저것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 **주가:** 주식의 가치, 가격
- **배당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주는 돈

정리하기

1. 은행업무와 보험

- **예금:** 은행에서 계좌만들기,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 **대출:** 금리 고려, 정부 지원 확인, 은행 거래 실적이나 담보 확인
- **보험:** 미래의 위험에 대비, 사회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2. 한국에서 돈 관리하기

- **예금**
 -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음
 - 가장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
- **주식**
 - 주식을 구입하여 주주가 됨
 -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경우 차익을 얻거나 배당금을 받음
- **부동산**
 - 상가나 아파트, 대지 구입
 - 임대료 수익을 얻음

- 채권

- 정부나 기업, 은행의 채권 구입
- 약속된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음

대한민국의 법질서

18. 가족에 관한 법

가족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다. 가족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상속 등과 같은 상황을 통해 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번 차시에서는 혼인과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출생과 사망, 상속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학습목표

1.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출생, 사망 및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01 혼인과 이혼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은 모두 법과 관련되어 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생활도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철수 씨와 영희 씨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는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기만 한다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보호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철수 씨와 영희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 씨가 사망하였다면, 영희 씨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철수 씨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없다.

만약 철수 씨와 영희 씨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서 하는 **협의 이혼**과 어느 한 쪽만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정당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의 예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양육을 맡지 않은 쪽의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돌보기: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 재판은 어디서 할까?

가정법원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청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다루는 법원이다. 가정법원을 별도로 둔 것은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르고 청소년 관련 사건은 가정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둘을 함께 묶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군데에 있으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진행한다.

주요 용어

- **효력**: 법률이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

02 출생과 사망, 상속

철수 씨와 영희 씨가 결혼한 뒤 몇년후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 한국의 법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군청, 주민 센터 등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이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떨까? 그 때에도 출생과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법에서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언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유언이 사망한 사람의 뜻인지를 사망한 후에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유언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의 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대상과 순위, 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앞 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뒤 순위의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자녀 등과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의 **1.5배**를 상속받는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부인 영희 씨, 딸 한나, 아들 두리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영희 씨와 한나, 두리가 철수 씨가 남긴 유산을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 상속 순위

1.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주의할 점은 상속을 받을 때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유산 중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을 때에는 아예 상속을 받지 않거나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정말 꼭 이혼해야 할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협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선택인지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한다. 이혼 수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인데, 만 19세 미만이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가정폭력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숙려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부가 모두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주요 용어

- **상속**: 죽은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음
- **유언**: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
- **유산**: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
- **숙려**: 신중하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

정리하기

• 혼인과 이혼

◦ 혼인

-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가 필요함
- 부부는 부양, 동거, 공동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이혼

-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음
- 이혼 시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함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를 가짐

- 출생과 사망, 상속

- 출생

-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필요함

- 사망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이 이루어짐

- 상속

- 상속에는 유언에 따른 상속과 법에 따른 상속이 있음
 - 법에 따른 상속의 경우, 상속 대상, 순위, 비율이 정해져 있음
 - 상속에는 빚과 재산이 모두 포함됨

19.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인간의 사회생활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동, 경쟁, 갈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범죄는 다른 구성원과 사회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차시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범죄의 개념과 기본 원칙,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범죄를 처벌하는 다양한 형벌에 대해 확인해 본다.

학습목표

1. 범죄의 개념과 기본 원칙,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범죄를 처벌하는 다양한 형벌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01 범죄란 무엇일까?

범죄라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에 어긋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상해, 폭행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이나 협박 등 범죄
- 절도, 횡령, 사기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
-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박,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를 **경범죄**라고 부른다.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것, 개나 고양이가 같은 애완동물이 길이나 공원에 내놓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것,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는 것 등이 모두 경범죄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돋보기: 이런 범죄에는 이런 형벌을!

대한민국 형법에는 각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를 정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형벌이 더 커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다른 사람의 집의 문이나 벽, 창문 등을 부수고 들어와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칼과 같은 흉기를 가지고 물건을 훔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용어

- **반사회적:** 사회의 규범이나 이익에 반대되는
- **법정주의:** 법으로 규정해 놓음
- **감금:** 일정한 장소에 가둠
- **협박:**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함
- **횡령:** 남의 돈이나 물건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킴
- **징역:** 죄인을 교도소에 일정 기간 가두어 두는 형벌
- **야간:** 밤 사이, 밤 동안에
- **침입:** 침범하여 들어옴
- **범죄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1. **전화:** 국번없이 112 또는 1301 (휴대전화 지역번호+1301)

2. **인터넷:** 대검찰청 신고센터

02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판의 결과 죄가 인정되는 사람은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을 **형벌**이라고 부른다. 형벌은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크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뉜다.

- **생명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사형)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징역, 금고 등)이다.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게 된다.
- **재산형**은 벌금을 물리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몰수)과 같이 재산을 빼앗는 형벌이다.
- **명예형**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빼앗는(자격정지, 자격상실) 형벌이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 곳 에나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 돋보기: 고민하지 말고 마을변호사에게 털어 놓으세요!

도시 바깥의 면, 리 등 작은 마을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곳이 많아서 주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마을변호사 제도**'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마[을]에 변호사를 두고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출범한 이래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약 1,500여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 주민은 마을변호사캠페인 사이트(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 접속하여 해당 마을의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가 상담하는 주제는 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토지 등의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요 용어

-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정리하기

• 1. 범죄란 무엇일까?

- **범죄** :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 **여러 가지 범죄** :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히는 범죄,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 등.
- **경범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

• 2. 형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형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
- **형법에 규정된 형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 **경범죄에 대한 처벌**: 범칙금.

20. 형사 사건의 해결과 인권 보호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형사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행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형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해 본다.

학습목표

1. 형사 사건의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 형사 절차

철수 씨와 영희 씨는 가족기념일을 맞이하여 외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민식 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끝에 민식 씨가 철수 씨를 밀쳤고, 철수 씨는 팔에 멍이 들었다. 이 경우 민식 씨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식 씨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되면 국가 기관은 수사에 들어간다. 이때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또는 용의자) 라고 부른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인 민식 씨와 피해자인 철수 씨,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민식 씨의 죄가 인정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 검찰에서는 수사기록 등을 살펴본 후,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지를 판단한다.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부르며,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불린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 형사 재판은 각종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입장과,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릴 것을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을 모두 듣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 한다. 그리고 유죄인 경우 **양형 수준** (형의 정도)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갇히게 되고,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재산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 기관에 돈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 돋보기: 집으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각 지역의 기관에 상주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기준 전국 40개 기관에서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법 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결,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시도의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 사회복지협의회에 전화하여 법률홈닥터와의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http://blog.naver.com/homedoc2013/40204257232>)

주요 용어

- **수사:** 찾아서 조사함
- **송치:**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 **추정:** 추측해서 판단함
- **양형:**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나 양을 결정하는 것
- **벌금:** 5만원 이상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 **상주:** 어떤 곳에 항상 머물러 있음

02 인권의 보호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먼저, 형사 절차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때에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처벌을 받을 때에도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

다고 생각되면 법원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심사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된다.

피고인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 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문을 통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문이나 협박, 폭행과 같은 방법으로 자백을 한 경우에 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탐구탐구: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

• 법제처의 다국어 생활법령

- 법제처에서는 외국인들도 법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언어로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등의 언어로 아동 교육, 소비자 보호 외국인 근로, 주택임대차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oneclick.law.go.kr/CSM/Main.lal>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의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에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가족, 난민 등 이주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 일본어, 타이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필리핀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 대해 직접 상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담사례집을 통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 <http://www.migrantlaw.or.kr/default.asp>

주요 용어

- **압수**: (증거 확보를 위해) 물건을 빼앗음
- **수색**: (증거 확보를 위해) 구석구석 뒤져서 찾음
- **영장**: 판사가 강제 처분을 허가하거나 명령하는 서류
- **석방**: 갇혀 있던 사람이 풀려남

정리하기

1. 형사 절차

- 범죄 발생 → 인지/고소/고발 → 수사 개시 → 검찰 송치 → 기소 → 형사 재판 → 판결 → 형의 집행.

2. 인권의 보호

-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체포나 구속이 적절한지를 심사.
- 고문의 금지.
- 무죄추정의 원칙.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